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배포시점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 16:00
담당 부서	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 김미정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 허성희 (02-2110-1549)

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‘잊혀질 권리’ 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은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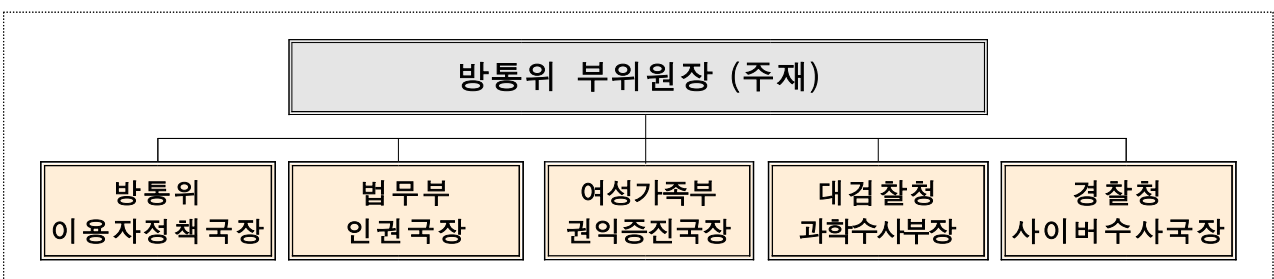
- 방통위, 법무부, 여가부, 검찰청, 경찰청 5개 부처 고위급 협의회 개최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와 법무부, 여성가족부, 검찰청,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‘잊혀질 권리’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(이하 고위급 협의회)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.

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’ 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이번 고위급 협의회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, 여성가족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,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, 대검찰청 원신혜 형사4과장,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해 진행되었다.

《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‘잊혀질권리’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》



이날 회의에서는 ▲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, ▲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▲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, ▲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하였다.

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“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, 지난번 발생한 ‘엘 성착취물 범죄’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” 고 하면서,

“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 ‘민·관 협의회’ 도 구성·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 끝.

